

대법원은 2월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1천192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이 별도 담합이나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정유업체 손을 들어줬다.

연말에는 농심이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서 부과받은 1천8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공정위가 또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라면값 담합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지면 기업이 낸 과징금만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도 덧붙여줘야 한다. 공정위가 2010년부터 5년간 법원에서 패소해 기업에 지급한 이자(환급 가산금)는 992억원 수준이다.

대법원 패소가 이어지자 공정위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주요 불공정 혐의 사건에 대해 잇달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앞둔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정이 대표적이다.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시장 1위 업체인 골프존도 가격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예전보다 훨씬 간간하게 사건을 심의한 결과다.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전원회의 의결의 법적 완결성을 법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원회의의 이런 움직임이 자칫하면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사건처리 절차 대폭 개편

찾은 패소로 몸살을 앓던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를 대폭 개편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형 과징금 부과 사건의 패소와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무리한 조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처리 3.0’ 도입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들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받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고 ‘조사절차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현장 조사 때 지참하는 조사 공문에 기업의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 대상을 특정해 명시하기로 했다.

또 공문에서 밝히지 않은 혐의나 조사 대상 리스트에 없는 자회사는 함부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피조사 업체의 조사 거부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 조사를 맡은 공정위 직원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직원의 현장 조사가 끝난 이후 담당 과장이 조사받은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애로사항 등을 들어보고, 공정위 직원

들이 위압적 태도로 현장조사를 한 것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새로운 사건처리 지침에는 조사 사건을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만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막기 위해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독과점 남용 9개월, 담합 13개월)하기로 했다. 담합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경제협력

■ 자유무역협정 영토 확대

한국은 2015년에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협정문을 정밀 분석하면서 추가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중 FTA 발효〉

중국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한·중 FTA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12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 한·중 양국이 12월 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한·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찬을 교환했다. 김장수 주중국대사(왼쪽)와 중국 측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외교공찬을 교환하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 달러(약 1조5천960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4천3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한·중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 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였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했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 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공산품 중국은 발효 즉시 품목 수 기준 전체 11.8%(796개), 수입액 기준 전체 5.2%(87억달러)에 대한 관세(기준 무관세 제품 제외)를 매기지 않았다.

10년 내에는 전체 품목의 71.7%(4천823개)와 전체 수입액의 66.4%(1천103억 달러)의 관세가 사라진다. 20년 내에는 품목 90.2%(6천68개), 수입액 85.1%(1천414억 달러)까지 개방 폭이 커진다.

우리는 FTA가 발효되자마자 전체 품목의 40.1%(4천4개), 전체 수입액의 10.3%(80억 달러)의 관세(기준 무관세 제품 제외)를 철폐했다.

10년 뒤에는 전체 품목의 90.0%(8천988개), 전체 수입액의 79.9%(617억 달러)의 관세를 없애며 20년 뒤에는 품목 기준 97.1%(9천700개), 수입액 기준 93.5%(722억 달러)의 시장이 개방된다.

집적회로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플라스틱 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은 이미 중국 수출 때 무관세였으며 동고,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견사, 미사, 모사, 밸브 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의 중국 측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됐다.

5년 뒤 중국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 액화 프로판, 면·마, 전동기 부품, 이앙기, 지게차, 공업용 스파이어가 있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중후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유아복, 운동복, 농기계 세정기, 집진기, 편광재료판, 냉장고(550ℓ 이하), 세탁기(10kg 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의 중국 관세는 10년 뒤에 철폐된다.

LCD 패널은 9년차부터 감축돼 10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순면사, 디젤트럭, 안전벨트 등의 중국 관세는 15년 뒤, 유압식 원동기, 목재 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대형냉장고, 콘택트렌즈 등은 2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플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나일론사, 굴착기, 승용차, 핸들, 클러치, 컬러TV, OLED, 귀금속장식품 등은 중국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수산물 이미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목 수 기준 29.8%, 수입액 기준 60.0%를 우리 측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미 FTA는 99.1%, 한·EU FTA는 99.8%(이상 수입액 기준) 수준으로 우리 시장을 개방했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의 품목 기준 92.8%(1천360개), 수입액의 55.8%(3억 달러)를 개방하기로 해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뺀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치, 혼합조미료에는 관세 감축률 1%를 적용했고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팔 등의 관세 감축률은 10%로 정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저율 관세품목이나 가축 사료원료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쌀, 설탕, 밀가루 등 102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육류는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업종별 전망



전기 전자

- 전자 무관세 품목 많음, 혜택 크지 않을 전망
- 전기양국 모두 보호수준 높음, 일부 효과 전망



자동차

- 승용차 관세 관련 효과 없음, 수출 확대 효과 미미
- 부품 중국의 장기간에 걸친 개방으로 관세 철폐 효과 지연될 전망



섬유 의류

- 섬유 한국 보호 수준 높음, 중국 개방 확대 통한 효과 유리
- 의류 한국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될 전망



석유 석유화학

- 석유 중국 장기철폐 수용, 대중 수출 전망 불투명
- 석유화학 양국 모두 보호수준 높음, 일부 효과 전망



철강

- 한국 이미 수입철폐에 무관세, 중국 관세철폐로 한국의 수출 및 진출시 단가 절감 효과 기대



기계

- 중국 관세 조기철폐로 한국 수출 확대에 도움



농식품

-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보통 수준 개방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냉동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사과, 배, 포도 등에 대한 중국 관세는 10년 내에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경우 조기, 갈치, 넙치, 홍어(이상 냉동), 건조 멸치 등 불법조어 대상 품목과 고등어(냉동), 소라 등 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율화율 99%(품목 수 기준)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10년 단기 철폐될 예정이다라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 베트남 FTA 발효〉

한국의 3대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과의 FTA도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한국은 베트남에 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등을 수출하고 의류, 신발, 목재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 베트남 FTA는 국내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라고 불린다. 한국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 아세안 FTA를 통해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 양자 간 FTA를 통해 상품과 규범 분야의 개방 폭을 더 키웠다.

한국은 한· 베트남 FTA를 통해 한· 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 냉동), 냉동 생강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천cc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

이로써 한국 시장의 개방률은 94.7%(이하 수입액 기준, 한· 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은 91.7%)가 되고 베트남 시장은 92.4%(한· 아세안 FTA 86.3%)를 개방하게 됐다.

상품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장 개방률은 각각 95.4%, 89.9%가 된다. 관세는 최장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업계는 섬유, 식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 뿐 아니라 가전,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SD) 개선 등 기존 한· 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타 기계· 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특혜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종이 없는 무역, 전자 서명 등 전자상거래 관련 챗터도 포함시켰다.

〈한· 뉴질랜드 FTA 발효〉

한· 뉴질랜드 FTA도 2015년 12월 20일 한· 중, 한· 베트남 FTA와 함께 정식 발효됐다. 뉴질랜드는 우리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역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장인 만큼 타이어와 냉장고

등 여러 공산품의 현지 수출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 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하던 낙농품은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 셰이프가드(금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세계 최대의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5년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12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타결됐다.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명실상부한 최대 메가 FTA로 불린다.

2011년 기준으로 인구 7억8천만 명, 명목 GDP 26조6천3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1천850억 달러다. 전 세계 명목 GDP의 38.2%, 무역규모의 27.8%를 각각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2개 회원국으로 애초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시장 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 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미 FTA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공산품의 경우 TPP 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PP 협정상 공산품 관련 미국의 대일 양허 즉시철폐의 비율은 67.4%(이하 수입액 기준)인데 비해 한· 미 FTA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가 무관세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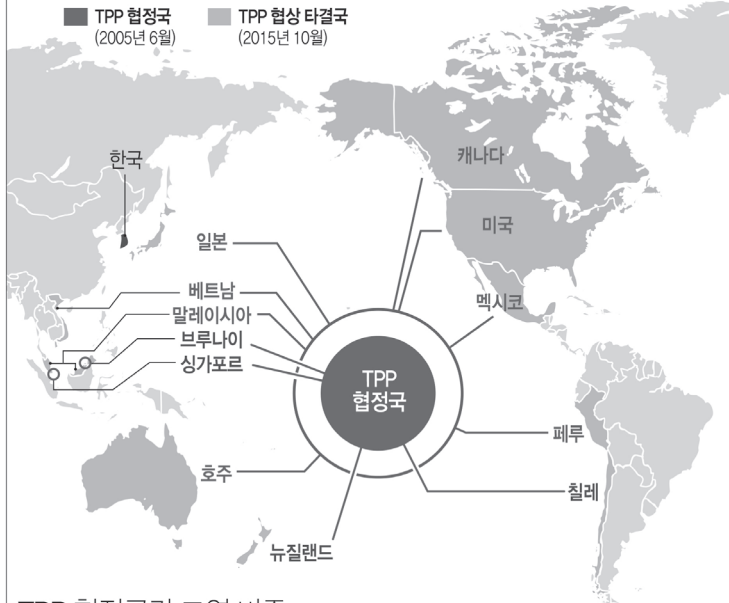
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호주 FTA는 96.7%, 한· 캐나다 FTA는 95.7%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에는 한· 미 FTA에는 없는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챗터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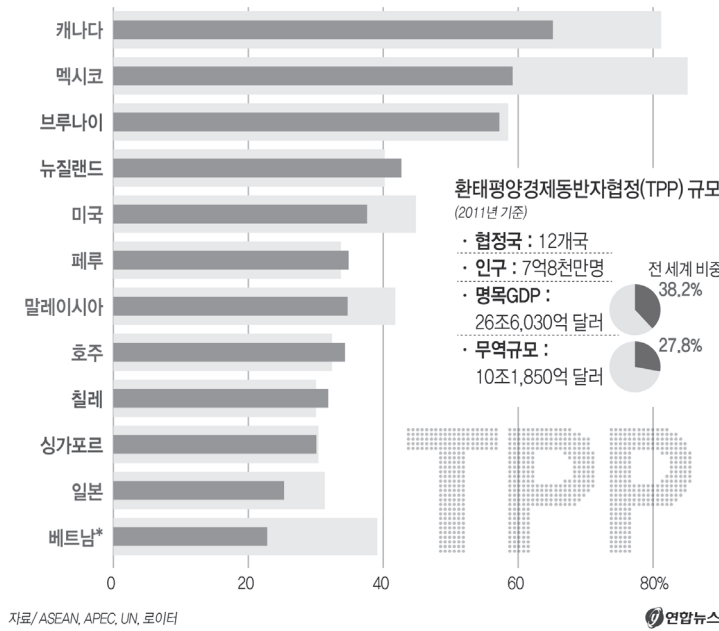
특히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도입, 국영기업 규제, 환경분야 이슈 반영 등이 새로운 논점이 될 전망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TPP 협정국간 교역 비중

2014년 기준 각국 전체 교역량 중 TPP 협정국간 교역 비중(* 2013년 기준) ■ 수입 □ 수출



자료/ ASEAN, APEC, UN, 로이터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됐다. 2015년까지 10차례 공식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RCEP가 타결되면 2015년 기준으로 22조7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28조1천억 달러 규모의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권이다.

한·중·일 FTA는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됐으며 2015년까지 9차례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동북아 경제권이 글로벌가치사슬(GVC)로 단단하게 묶이게 된다. 교역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향후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중미와 남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중미 FTA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이 대상이다.

2015년 6월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11월 2차 협상을 개최해 상품 양허·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논의했다.

중미 국가들은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현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진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중미 FTA에 정부조달 챕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GPA는 정부조달 분야에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 간 협정 중 하나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전략적경제협정(SECA)이라는 이름으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15년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2015년 12월 뉴욕에서 예비 협의를 개최했다.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누적은 TPP 가입 12개국 간의 무역 때 역내에서 생산한 재료와 공정 모두를 누적해서 원산지로 판정할 때 고려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로 인정받으면 역내 무역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상 박차>

우리나라는 2015년 다른 FTA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며 '경제영토' 확장에 공을 들였다.

■ 교역 1조 달러 무산...2011년 이후 처음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우리나라 교역 1조 달러가 2015년 무산됐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심해진데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유가가 교역을 얼어붙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액이 5천269억 달러로 2014년보다 8.0% 줄었고 수입도 4천365억 달러로 1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규모는 9천634억 달러로 2014년 1조982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2012년 -1.3%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9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가하락에 따라 수출금액은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5.4%(2015년 1~3분기 실적)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랐다.

품목별로는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감소율이 각각 36.6%와 21.4%를 기록했다. 유가영향 품목에서만 289억 달러가 감소돼 총 수출 감소분 458억 달러 가운데 63%를 차지했다.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가 각각 10.0%, 0.5% 늘었지만 컴퓨터(-1.0%), 일반기계(-3.2%), 자동차부품(-4.1%), 자동차(-6.4%), 평판디스플레이(-8.1%), 섬유류(-10.3%), 철강(-15.0%), 가전(-16.8%) 등 품목 대부분이 감소됐다.

반면 화장품(53.5%), OLED(25.0%), SSD(26.6%) 등 신규 유망 품목의 수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24.3%나 늘었다. 현지 생산기지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3위의 수출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 외 미국(-0.6%), 중국(-5.6%), EU(-6.9%), 일본(-20.4%) 등 주요국의 수출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유가 등의 하락으로 석탄(-17.8%), 철강제품(-24.9%), 가스(-41.0%), 원유(-41.8%), 석유제품(-48.8%) 등 원자재 주요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자본재는 메모리반도체와 '프로세스와 컨트롤러'가 각각 34.7%, 15.7%씩 증가했다.

소비재는 자동차·휴대폰(82.5%) 등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기타 플라스틱제품과 과일류는 각각 -7.4%, -20.9%를 기록하며 줄어들었다.

■ 외국인직접투자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 209억1천만 달러로 전년도 190억 달러에 비해 10.0%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중동지역 국가들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착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159억5천만 달러로 2014년 120억6천만 달러에 비해 32.3% 급증했다.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국에 제출한 투자 신고서 상 금액을, 도착 기준은 국내 은행에 실제 입금된 외화 규모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신고 기준 국가별 투자금액은 미국이 54억8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투자금액은 19억8천만 달러로 66.3% 뛰었으며 중동은 13억8천만 달러로 514.1% 늘었다.

EU와 일본의 직접투자 금액은 각각 24억9천만 달러와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1.6%와 33.1% 감소했다.

중국의 투자는 한·중 FTA와 한류 기대 효과 등으로 전년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동 지역은 정상외교를 계기로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일본 투자는 엔저 영향으로, EU 투자는 대형 인수합병(M&A) 투자의 기저효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7억3천만 달러로 31.7%, 건설 등 기타는 16억2천만 달러로 871.7%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45억6천만 달러로 40.3% 축소됐다.

한류 등 관광 수요와 FTA 플랫폼을 활용한 물류 수요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투자와 중동 자본의 국내 건설사 지분투자로 인한 건설업 투자는 증가했으나 제조업 분야 대형 M&A 투자의 기저효과와 저유가, 엔저 등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땅을 구입해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이 141억1천만 달러로 28.0% 증가한 반면 M&A형은 68억 달러로 14.8% 감소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IT·석유화학 등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와 서비스업 분야의 복합리조트·물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M&A형 투자는 201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글로벌 M&A 시장 모펀드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해외기업·PEF 등 국내 기업 인수 및 중동·중국시장 진출 목적의 전략적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 남북교역

2015년 연간 남북 교역액 규모가 27억1천349만 달러로 전년 최고치인 전년 23억4천312만 달러보다 15.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 금액은 11.0% 늘어난 12억6천 128만 달러, 반입 금액은 20.3% 증가한 14억5천222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남북교역 누적액은 245억 283만 달러를 기록했다.

남북교역 규모는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05년부터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19억7천621만 달러로 20억 달러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빚어졌고 교역액은 절반 가까운 11억4천891만 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고 차질을 빚었던 생산을 회복하면서 남북교역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4년에는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대부분 차단되면서 개성공단은 남북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반도체 품목의 반출이 급증한데다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의류제품들은 '메이드인차이나'보다 높은 신뢰를 받고 있어 의류 주문이 늘어난 덕분에 교역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2015년 12월부터 발효된 한·중 FTA에서 한국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